

데스크 시각



윤영기 사회·체육담당 부국장

장모씨는 2003년 7월 자신이 몰던 차량이 저수지에 추락하는 바람에 아내를 잃었다. 그는 빠져나왔으나...

신뢰 잃은 수사결과

그가 최근 대법원의 재심결정으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 사법체계가 작동하고 있는...

은편칼럼



박행순 전남대 명예교수

전 세계적으로 자살은 심각한 문제이고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우리에게 자살은 대단히 중대한 사회문제이다. 특히 작년에는 여러...

기고



윤현식 컬체네트워크 대표

코로나19에 한숨짓고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눈물짓는 소상공인의 삶은 나아질 기미 없이 더욱 힘들기만 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광주지역 내...

‘저수지’, ‘막걸리’ ... 재심 또 재심

가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수사력을 의심케 하는 사안이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장씨는 차가 물에 빠졌을 때...

지역과 20년 형이 확정됐던 아버지와 딸의 재심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형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사람을 중심에 둔 수사·재판 절실

재판부는 “검사가 진술을 이끌어내 검사의 생각을 주입하며 유도신문을 하거나 수사 방향을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자살을 ‘극단적 선택’이라 부르지 말자

보건복지부의 2022년도 자살예방백서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고의적 자해(자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고의적 자해는 범위가 다양하고 모든 자해가 자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역시 바른 대체어 또는 동의어는 아니다.

적 범죄보다는 그들의 내면을 헤아리는 재판관의 심안뿐 아니라 ‘자살’이라는 단어가 피고인들 간의 대화에서, 그리고 법정용어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사실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자영업자 700만 시대, 돌파구는 소상공인

역자원이나 나다움으로 차별화에 성공한 브랜드로 인식되는 ‘크리에이터형 소상공인’ ▲동네 거점 기업으로 거점 공간, 랜드마크, 유동 인구, 정체성 등 상권 공...

자방 등이다. 로컬 브랜드 수요에 부응해 서울시는 2022년 처음으로 골목상권과 로컬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골목상권을 로컬 브랜드 축진지구, 로컬 브랜드 강화 지구, 생활상권 육성지구, 전통시장 보전 지구로 나뉘 지역 특색에 맞게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社說

원효사지구 이전사업 ‘땅장사’ 논란이러니

무등산 원효사 집단시설지구(무등산향 일대) 이전 사업을 놓고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와 상인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사업이 장기 지연되는데다 이전 대상지 땅값을 놓고 환경부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상인들이 반발하면서다.

라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평당 30만원에 사들여 놓고 감정가 대로 자신들에게 분양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상인들의 분노는 어찌보면 당연하다. 무엇보다도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환경부와 광주시가...

지산동주택조합 입주자 두 번의 피해 없어야

본래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 시행의 주체가 돼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아파트를 짓는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지난 2004년~2021년 17년 동안 전국 전체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17%만 입주까지 제대로 진행됐을 정도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단 한 조합원은 업무대행사 직원 등을 상대로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송을 제기해 최근 재판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최근 시공사의 유동성 위기설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광주시내 22곳에서 신축 공사를 벌이고 있는 문제의 시공사는 이중 4곳 사업장에서 중도금 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사업장에도 불뚱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無等鼓

에로부터 땅(토지)을 어떻게 분배하는지는 항상 논쟁거리였다. 농경 중심 사회라는 특수성이 있었지만, 땅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도 땅을 분배하는 문제로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논쟁은 국왕이 있는 한양에서보다는 지방에서, 전통 유학보다는 백성의 실제 삶과 관련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인 실학에서 주로 다뤄졌다.

정도의 가구를 한 단위로 묶어 이들에게 토지를 공동 경작, 공동 분배하게 하자는 ‘여전제(隸田制)’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이 비현실적이고 급진적이라 할지라도(실제로 정약은 여전제를 대신해 사방의 토지를 우물 정(井字) 모양으로 아홉 등분해 공전과 사전으로 구분하는 정전제로 전환), 그 저변에는 양반 관료와 지역 토호의 토지 수탈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고 농민의 경작권을 보호하려 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분배의 원칙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김자복,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